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4마96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원 심 결 정 전주지방법원 2004. 9. 30.자 2004라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조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상대방, 이하 '채권자'라고 한다)가 채무자(재항고인,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

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화의채권에 기하여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화의절차개시 전에 착수된 강제집행은 이를 속행할 수 없고 화의절차 중에는 당연 중지되지만,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확정이후에 신청되어 결정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화의법(법률 제7428호로 2006. 4. 1. 폐지) 제42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화의절차 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8300 판결 참조), 한편 화의는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화의법 제58조),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여 화의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화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화의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여전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1998. 6. 9.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을 하였고, 1998. 8. 31. 화의인가결정을 하여, 1998. 9. 24. 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화의채권(1997. 11.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물품대금채권이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8. 20. 대전지방법원 98가합5474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1,135,49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화의절차 중임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금채권 중 194,071,892원에 대하여 2003.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타채84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화의절차 중에 화의채권에 기초하여 한 것이므로 화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화의인가결정 확정 이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새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하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에는 화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7.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